

보전소송절차 안내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의 진행 절차

보전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 등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1) 보전처분 가운데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예컨대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는데(『민사집행법』 제 280조 제1항, 제301조), 변론 또는 심문을 경유할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2)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밀행성의 요구 때문에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보전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채무자는 위와 같은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다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 채무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 들어 오시면 내려받기(download)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1)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다음과 같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켜 줄 것을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압류에만 해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307조)

(2) 취소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 (www.cardrotax.or.kr)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 채무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취소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download)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유의사항

(1) 주장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등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과시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나 주장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예: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1통, 부본2통),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상대방이 2통이면 사본3통).

(3)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신청 목적의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①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②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된 『소송대리위임장』과 500원의 인지가 첨부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download)할 수 있습니다.

(4)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법관 앞에서 사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

어 있는 경우에도 재판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